



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

-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,
'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'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-

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'AI 범죄 대응 범부처* 협의체'가 공식 출범했다.

*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법무부, 성평등가족부,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식품의약품안전처, 경찰청 등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26일 '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' 키프 회의 개최하고,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'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' 및 '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'을 논의했다.

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, AI 허위·부당광고,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, 금융, 통신, 개인정보, 수사,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.

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'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'은 AI 범죄 예방, 탐지·차단, 수사·단속, 피해회복, 재발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 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으며,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

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·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.

이 날 키포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“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”면서 “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,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‘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’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박소영 (02-2110-1538)
공동 배포	과학기술정보통신부	책임자	과 장	최우석 (044-202-6360)
	인공지능안전신뢰과	담당자	전문관	박선례 (044-202-6368)
	외교부	책임자	과 장	김진주 (02-2100-7281)
	국제안보·사이버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지영서 (02-2100-7138)
	법무부	책임자	과 장	조재철 (02-2110-3547)
	형사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임현채 (02-2110-3545)
	성평등가족부	책임자	과 장	김성벽 (02-2100-6161)
	디지털성범죄방지과	담당자	사무관	오현승 (02-2100-6162)
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김태훈 (02-2100-2970)
	금융안전과	담당자	사무관	이다행 (02-2100-2975)
	공정거래위원회	책임자	과 장	권순국 (044-200-4405)
	소비자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손은정 (044-200-4414)
	개인정보보호위원회	책임자	팀 장	(공석)
	인공지능프라이버시티팀	담당자	사무관	정진아 (02-2100-3073)
식품의약품안전처	책임자	팀 장	박영민 (043-719-1901)	
사이버조사팀	담당자	사무관	최경식 (043-719-1902)	
경찰청	책임자	총 경	이동환 (02-3150-2041)	
치안인공지능정책과	담당자	경 정	이치화 (02-3150-1419)	